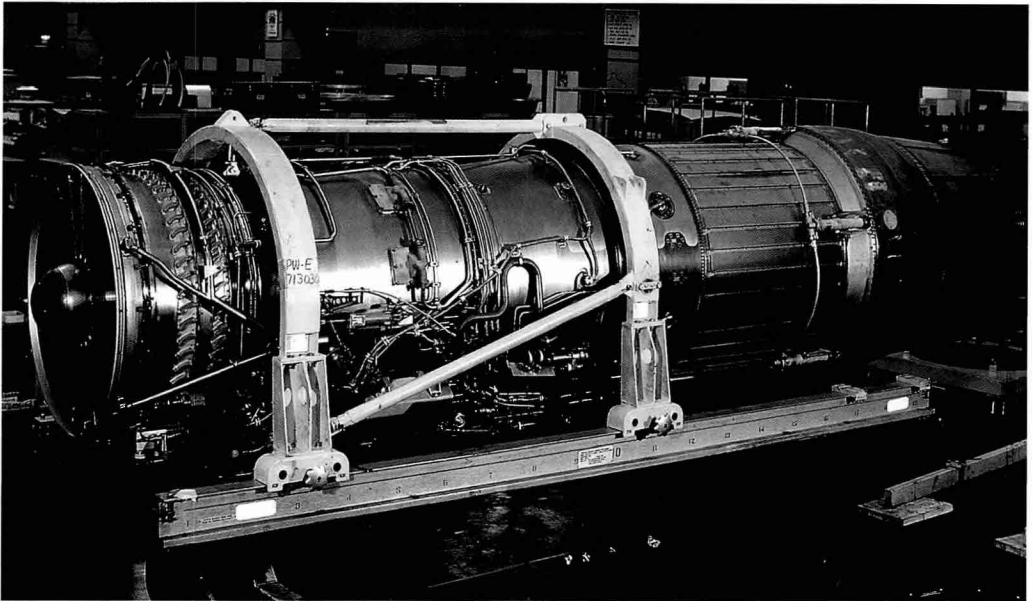


삼성항공, 항공기 엔진부품 대규모 수주

- 엔진부품의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 인정 받아



삼성항공이 제작해 KF-16에 장착한 F100-PW-229 엔진

삼성 항공(항공방산부문 대표:李重求)은 최근 세계 최대의 항공기 엔진 제작사인 미 플랫 앤 휘트니(P&W)사에 1억 5천만불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항공이 공급하는 부품은 F-16 전투기용 F100 엔진, B-737기용 JT8D 엔진 등 전투기와 여객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엔진 케이스(Case)와 링(Ring) 등 30여개 품목을 올해부터 향후 10년간에 걸쳐 공급하게 된다.

삼성항공은 지난 86년부터 플랫 앤 휘트니사의 대형 항공기 엔진 국제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이번 수주는 삼성항공이 그동안 생산해 온 엔진부품의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대규모 공급

계약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삼성항공은 기존 공급분을 포함할 경우 플랫 앤 휘트니사에 연간 5천만불 규모의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업체로 부상하게 됐다.

한편 삼성항공은 이번 계약외에도 지난해 3월 GE사와 얼라이드시그널로부터 7천만불 규모를 수주하는 등 최근 엔진 부품 수출과 해외 엔진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띠어 매년 두배 가량 수주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항공은 향후 엔진 부품 수출을 고부가 품목 위주로 전환하고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엔진 부품 단일 품목으로 올해 1억불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99 국방업무 무엇이 달라지는가?

- 조직개편, '99 국방예산 운용 등

■ 국방부 조직 개편

국방부는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99년 1월 2일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를 위해 분산되고 다원화된 획득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획득실」을 신설하여 획득업무관련 전담 조직 체제를 구축하고 인사와 인력 및 교육의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며, 계획과 예산체계를 일원화함과 동시에 의사결정 과정에 육·해·공군의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획득실에 국제사업관, 연구개발관, 분석평가관을 신설하고 사업조정관과 획득개발관을 획득정책국으로, 전력계획관과 예산재정국을 계획예산관으로 통합하며, 인사복지국과 조직인력관 및 보건환경관을 각각 인사국과 복지근무국으로 개편하였고, 재정심의관은 폐지하였다.

개편결과 1차관보·2실·19국·72개과를 1차관보·2실 18국·70개과로 편성하여 1국 2과를 감축하였고, 전반적으로 육군 직위를 줄이고, 일반직·해군·공군 직위를 증가시켰다.

■ '99 국방예산 운영

'99년도 국방예산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금년보다 0.4% 감소된 13조 7,490억원으로(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하였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강화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방위력개선비는 4조 1,403억원

으로 금년예산보다 1.5%인 601억원 증액 편성하여 국방비중 방위력개선비 비율을 29.6%에서 30.1%로 높였다.

운영유지비는 9조 6,087억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1,1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다. 그러나 장병 사기복지와 전비태세 유지, 국방정보화 사업 등은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필수소요를 증액 반영하였다.

장병 사기복지 분야를 위하여 증액된 소요는 767억원으로 접적지역 근무수당, 잠수함수당, 각급부대 운영비 등에 133억원, 장병의 급식비와 피복비 230억원, 병영기본시설을 확충하고 군 숙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304억원, 군 인력의 사회적응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증액소요 100억원 등이다.

전비태세 유지를 위하여 증액된 소요는 1,153억원으로 전차, 함정, 항공기 등의 정비비가 711억원, 방위력개선 사업으로 증가된 장비의 수리부속, 탄약, 연료비 등에 442억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정부의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3만명의 추가 임용 병력에 대한 급여, 급식, 피복비 등으로 26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국방 정보화 추진, 교육 훈련장 확보 등에 455억원을, 물가인상 등 기본소요로 63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반면에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은 금년 예산보다 4,38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다.

'99년도 국방예산은 국정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절감 편성으로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기로 하였으며, 내년도 국방운영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속적인 국방개혁의 추진과 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극복될 것

으로 기대된다.

■ '99년 이후 방위비 분담 협상 결과

'98년 2월 국방부는 환율 급등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의 환차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美측과 지불방법을 재조정하여, 이미 합의된 3.99억불을 3.14억불로 조정함으로써 약 1,300억원에 달하는 환차손을 절감한 바 있다.

'98년 6월부터는 '99년 이후의 분담방안에 대해 과장급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국방장관 회담, 고위실무급 협의 등을 거쳐 지난 12월 15일 타결하였다.

6개월간에 걸친 협의 결과 '99년도 분담금액을 원화 2,575억원과 미화 1억 4,120만불로 합의하여 3.33억불로 하였으며, 이 금액중 8,000만불에 해당하는 군사건설비는 한국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99년에는 1/2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2000년도에 지불토록 함으로써 '99년도 한국의 실제 부담액은 '95년 수준인 3억불 이하로 경감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합의한 분담기간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으로 하였으며, 2000년 및 2001년도의 분담금은 전년도의 GNP 변동률에 연동토록 하였다.

금번 '99년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내용은 '98년도에 조정된 분담금의 구매력을 유지해 준다는 최저 수준의 요구를 보장한 것이다.

이는 '96~'98년간 10%씩 증액되어 왔던 것에 비해, 금년도의 재조정 분담금 3.14억불에 대비하여 6%가 증액되어, 금년도 예상 물가상승률 8.5%보다도 낮은 수준일 뿐 아니라 인건비 전액과 군수지원비의 일부를 원화로 지불토록 합의하여 우리의 외환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군사건설비의 지불방법을 조정함으로써 '99년에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분담금은 2.9억불로 '95년 수준 이하로 경감되었다.

이와 같은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합의 결과는 한·미 양국이 동맹정신과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실증적 사례이다.

■ 국방 민원서비스 개선

국방부는 민원인에게 보다 질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제도 및 고충민원 처리, 국방신고센터 운영 등 민원관련업무를 통합운영하여 왔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 '9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 만족 국방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방 홈페이지에서 독립적으로 국방 민원 홈페이지를 새로이 개설해 민원인이 국방관련 정보 접근에 용이하도록 전자게시판을 개설하여 민원접수절차와 처리내용 및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게시함으로써 '99년 1월부터 민원 사무에 대한 실시간 질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개발중에 있다.

국방 민원 홈페이지는 행사부에서 개설한 「Homeminwon」 등과 같은 민원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민원 웹사이트 모음을 만들어, 이용자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폭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해 해당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민원인이 자택에서 편안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중에 있다.

내부적으로는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민원인이 개선된 민원제도들의 편의성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처리 편람을 작성하여 각군과 민원관련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며, 외부적으로는 "이제부터 국방신고센터가 바로잡겠습니다."라는 명제로 "국방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군 내부 부조리 및 비리사항을 즉시 개선, 시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관련 민원처리에 대한 절차와 근거를 제공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국방민원사무처리에 부족한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체 민원처리 규정을 만들어 국방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민원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된 제도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민원처

리에 대한 기관장과 간부 장교의 관심도 측정과 민원 현장의 친절 및 불친절 사례를 수집하여 전파하는 동시에,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도 측정을 정례화하여 주민위주의 국방민원행정이 초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며, 국민 만족 민원처리 부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속적으로 민원행정 지도방문과 감사를 아울러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에 입대한 자녀의 부대배치 현황을 통합, 지원하는 ARS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99년 1월 1일부터는 민원인이 기억하기 쉬운 국방부 대표전화 748-1111을 공개하여 동시에 10인 이상의 전화통화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원전화 폭주로 인한 안내응답 지연을 방지하여 민원인의 불쾌감을 해소하였다.

■ 방위산업 구조조정 및 전문화·계열화 재정비

향후 군소요와 민수와의 설비 및 기술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방산업체 구조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방산 참여 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화·계열화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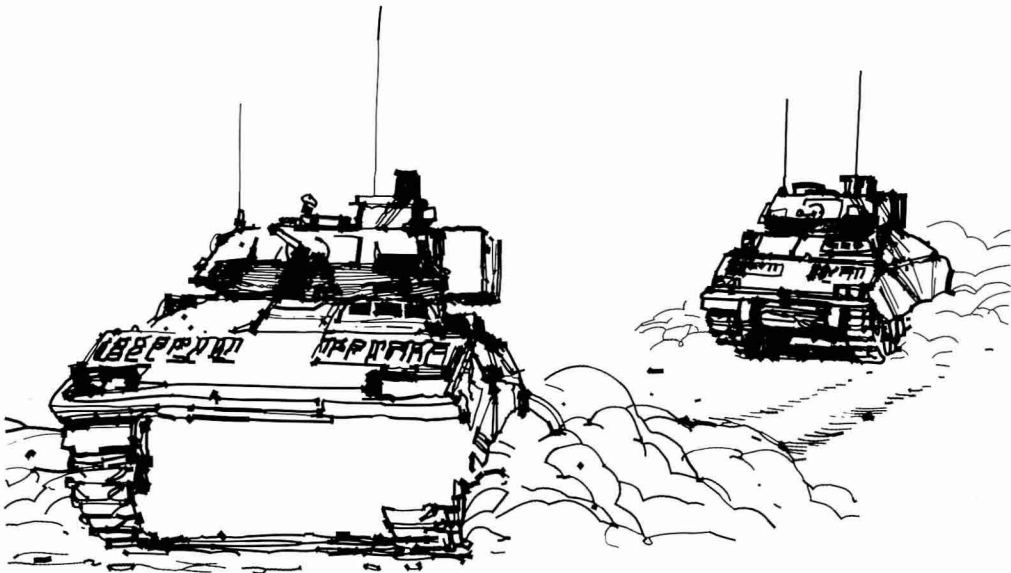
방산업체 구조조정 정책을 정립하기 위해 군소요가

소량이며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고, 민수와의 설비 및 기술의 호환성이 적은 무기체계는 경제성과 중복투자방지를 위해 독과점 체제를 유지(화포, 중계도차량 등)하고, 민수와 호환성이 높고 민간기술이 선도하는 분야는 경쟁체제로 전환(차륜차량, 일반함정, 통신전자 등)하며, 중소기업 보호 육성 품목은 별도 지정 관리(광학, 안테나 등)하는 등 '99년부터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적용할 계획이다.

전문화 및 계열화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98년 12월 방산특조법을 개정하였는데 종전에는 방산물자 또는 방산업체에 한정하였으나 '99년부터는 연구개발이나 기술도입에 의하여 생산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민·군 겸용기술 사업 활성화

민·군 겸용기술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동개발/상호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국가 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8년에는 민·군 겸용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규 제정 및 기본계획수립 등 범 국가적 기반을 조성하였다.



'99년부터는 시행령 및 규칙 제정, 기본계획 시행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발전시켜 민·군 겸용 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국과연에 「민·군 겸용기술센터」 설치로 민·군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교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고 국방규격 완화, 민·군규격 통일화로 상용품 조달을 확대할 예정이다.

'99년도 추진방향으로 과학기술부 주관하에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99년 2월 민·군 겸용기술사업촉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99년 4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민·군 겸용기술위) 할 계획이다.

민·군 겸용기술개발 추진으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인 자원활용 및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며, 민·군 규격 통일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용품의 조달을 확대하고 우수 국산제품의 활용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과학연구소 경영혁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추진 및 국방개혁 방침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를 첨단무기체계 및 핵심기

술 전문연구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경영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추진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추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고정부서 개념의 실단위 조직을 폐지하고 팀 운영제도를 도입하여 의사결정단계를 간소화하였다.

*개편전 : 8본부/단 35부 174실/과 총 217부서

*개편후 : 6본부/단 32부 29실

연구개발 과제중심제도(PBS)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관리개선을 위해 과제중심 및 성과위주의 임금체제로 전환하고, 사업책임자와 참여 연구인력의 실명화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다.

국방정보체계연구소를 국방과학연구소에 통합하여 정보화 관련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국과연 예산의 20%(615억)를 정책연구비로 전환하여, 국방연구개발업무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중점추진 연구개발과제에 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연구의 경쟁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획득본부 창설

- 분산된 무기·비무기체계, 정보체계 획득 업무 통합

국방

부는 전반적인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개선을 위해 '98년 4월부터 국방개혁의 핵심사항으로 추진해 왔던 획득본부(대외명칭: 획득실)를 '98년 12월 31일부로 창설하였다.

획득본부는 기존의 방위사업실, 기획관리실, 합참 등에 분산되어 있던 획득 관련 조직과 기능을 모두 통합하여 6개국 26개과로 편성하였다.

획득본부 산하에는 획득정책 및 투자예산 종합 조정기능을 관장하는 획득정책국, 국외도입사업을 전담

하는 국제사업관실, 국내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연구개발관실, 시험평가, 전력평가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분석평가관실, 기존의 군수국과 시설국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재편한 군수조달국과 군사시설국이 편성되어 있다.

또한 정보화정책 및 정보체계 통합을 담당하는 정보화기획관도 획득본부장의 업무통제를 받고, 국과연, 조달본부, 품관소와 CALS사업단 등 사업단도 획득본부의 조정·통제하에 두었다.

획득본부에서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무기체계 획득, 비무기체계 획득 및 정보체계 획득업무를 통합하여 획득업무를 일원화 하였고, 기존에는 계획, 예산, 집행기능이 각 기능부서에서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던 반면에 획득본부 체제에서는 획득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가 계획, 예산, 집행의 전과정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합참에 나누어져 있던 분석 및 시험평가 기능을 통합하여 획득업무의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토록 하였고, 연구개발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국내연구개발 기능과 관리능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기존 8개에 달하던 협의회와 위원회를 대부분 폐지하여 사업담당부서의 의사결정 책임성을 강화하였고, 필수 불가결한 3개 위원회만 존속시켰다.

특히 획득본부 체제에서는 사업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사업추진과 의사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원의 기록이 명시적으로 문서에 남게 된다.

획득본부 창설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전담책임제 및 사업실명제 실시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일관성 있는 사업관리 및 추진이 가능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또한 획득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무기획득기간 단축 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및 적기전력화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고, 연구개발관실 신설로 국방연구개발 관리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발족된 획득본부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 국방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이고 금번 개편이 완전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끊임없이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방위력개선 사업이 한푼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군 50년사 화보집』 발간

- 창군 이후 국군의 발전상과 활동상 담아

국방 부 정훈공보관실에서는 건군 50주년을 맞아 창군 이후 국군의 발전과정과 활동상을 담은 「국군 50년사 화보집」을 발간하여 대학교, 공공도서관 및 각급 군부대 등에 배포하였다.

총 356쪽 분량인 이 화보는 우리 군의 성장과정을 창군기부터 현재까지 8개 시대별로 구분하여 구성하였고, 북한 도발사, 군복제, 건군 50년 연표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화보에서는 육·해·공·해병대의 창설 등 건군과정, 한국전쟁, 월남파병, '50~'60년대 군의 문맹 퇴치교육과 국토재건 활동, '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장비현대화 및 방위산업 육성, '80년대 아시안게임·올림픽지원, '90년대 PKO활동, 건군 50주년 기념행사 등 건군이후 우리군의 발전과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군의 활동상 등 다양한 사진자료를 수록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군 역사자료로 활용이 기대된다.